

9. '91 主要業務計劃

건설부 1991. 1. 31

I. 1991년도 주요업무계획

기본방향

- 국민생활의 기본수요 충족
-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
- 국토의 균형개발과 효율적 관리
- 건설행정의 합리화

역점추진시책

- 주택공급의 확대로 주거안정도모
- 도로의 획기적 확충과 도로망의 체계적 정비
- 토지의 가수요억제와 실수요자에 대한 토지공급의 확대
- 맑은 물 공급과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·관리
- 도시공간의 합리적 활용
- 지역균형개발시책의 추진과 제도개선
- 건설산업의 육성·발전과 건설행정의 합리화
- 각 부문의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제3차 국토계획의 수립

1. 주택공급확대로 주거안정도모

가. 200만호 주택건설의 조기달성으로 주택가격 안정

- '83~'87 5년간 120만호 주택건설로 '80년대말 주택난을 심화시켰으나 지난 2년간 121만호가 건설되어 주택안정에 기여하고 200만호 주택건설도 '91년내에 달성전망
- 완공기준으로 보아도 '92년말까지 221만호가 건설될 것이며, 금년중에는 61만호가 완공되어 주택 및 전월세가격의 안정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
	'88~'92	'88~'89	'90	'91	'92
• 허가기준	2,529천호	779	750	500	500
• 완공기준	2,214	575	446	609	584

- 주택건설원활화 대책

- '91년중 택지 1,640만평을 개발·공급하는 한편, 도시지역의 택지부족난을 타개하기 위하여
 - 도시지역의 미활용 택지(자투리땅 등)을 적극 활용추진
 - 도심지 주·상복합건물 건설촉진
- 소요자금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 및 민영주택자금 4조 4,000억원을 적기에 공급
- 자재 및 기능인력 수급난 해소와 공기단축을 위하여 조립식 주택공급을 확대
 - 조립식주택 건축확대: 22,000호('90)⇒50,000호('91)
 - 수도권내 P.C공장입지규제 완화
 - P.C공장 설치시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

나. 저소득층 주거생활의 안정

- '90.11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개시되었으며, 금년중에는 근로자주택입주가 개시됨으로써 도시영세민과 저임금 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에 크게 기여

	'89	'90	'91	비 고
영구임대주택				
착공	43,253	60,000	70,000	재정지원: 9,700억원
입주	-	10,000	45,000	
근로자주택				기금지원: 9,600억원
착공	-	60,593	80,000	
입주	-	-	21,000	

- 도시영세민 밀집 불량주택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추진하여 “달동네”를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조성
 - 총 502개 지구 중(163천호) '90년까지 110개 지구를 지정하였고 금년 중 60개 지구를 추가지정
 - 금년 중 700억원을 지원하여 60개 지구의 불량주택 23천호를 개량하는 한편, 진입도로, 상하수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300억원을 별도지원
 - ※ 신·개축자금융자: 호당 1,200만원(연리 10%, 20년 상환)
- 무주택 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융자지원 확대

○ 지원규모: '90 '91

 ————— ⇒ —————

 3,450억원 4,450억원(29% 증가)

다.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체계 확립

- 실수요자 위주의 소형주택건설확대

- 공공부문(주공 및 지자체)은 18평 이하의 소형주택건설에 주력
- 민간부문도 소형주택건설 확대

• 국민주택규모 건설의무비율 : $\frac{\text{'90}}{60\% \text{ 이상}} \Rightarrow \frac{\text{'91}}{70\% \text{ 이상}}$

- 장기무주택자의 입주자격우선 부여

- 국민주택(18평 이하)은 전량을 무주택자에게 공급
- 소형민영주택(25.7평 이하)의 50%를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

- 주택가격 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체계 확립

- 주택전산화 추진으로 2주택 이상 소유자, 위장무주택자 등 무자격 당첨자 색출
 - 1단계('91. 3말까지): 6대도시 및 경기도
 - 2단계('91. 4 이후): 전국
-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은 입주기회를 부여하고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제도 개선 추진
 - 135m² 초과주택소유자는 민영주택청약1순위에서 제외
 -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은 장기예치자순에 따라 공급량의 20배수 이내로 청약제한

라. 신도시건설의 차질없는 추진

- '91년중 87,300호를 공급하여 수도권지역의 주택수급 불균형을 조기에 해소하고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

계	'89	'90	'91	'92 이후
294,000호	4,000	84,400	87,300	118,300

- 신도시 입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차질없는 설치 추진
 - 전 철: 분당-수서, 사당-금정, 일산-구파발 3개노선 기착공
 - 도 로: 분당-수서, 자유로 등 7개노선은 기착공
일산-수색 등 11개노선은 착공준비중
 - 상하수도: 분당, 일산, 평촌, 산본 4개신도시는 기착공, 중동은 착공준비중
 - 학 교: 국민학교와 중학교용지는 무상으로, 고등학교용지는 조성원가로 제공하고 소요예산을 확보(교육부)
- 특히 '91. 9 최초 입주(분당시범단지 2,500세대)에 대비하여 교통, 상하수도, 학교, 필수공공기관 등 기반시설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민·관합동대책반을 운영
- 신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의 공공기관을 유치
 - 유치대상기관은 수도권정비대책과의 조화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

마. 전자재 및 인력의 안정적 공급

- '90년에 허가된 대량의 건축물량이 금년에 본격착수되어 자재 및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수급상태와 경기동향을 수시 점검하여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책 강구
- 자재부문에 있어서는 시멘트, 철근 등은 생산설비 확장 등으로 큰 문제가 없으나 골재의 수급전망은 다소 불안한 실정이므로 '90대비 15%가 증가한 6,483만^m³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
 - 양질의 해사공급을 위한 세척용수 공급확대 및 하역기능확대
 - 초평도(채취가능량 860만^m³) 등 새로운 하천골재원 개발
 - 석산 등 골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골재채취촉진법(가칭) 제정추진
 - 체계적인 골재개발추진을 위한 골재채취전담회사 설립
 - 권역별 부존량 조사를 실시하여 중·장기 골재수급계획 수립
- 기능인력난 완화대책
 - 공공직업훈련과 기업내 인력양성 등을 통하여 기능인력 공급을 17천명('90)에서 30천명('91) 수준으로 확대
 - 노동부 및 건설협회의 취업정보센타를 통하여 유휴인력을 적극 흡수

- 건축물량이 집중되는 신도시건설의 인력수급에 우선 대처
 - 상반기중 분당지구에 “합동기능공 양성소” 건립

2. 도로의 획기적 확충과 도로망의 체계적 정비

가. 교통애로구간의 조기 해소

(1) 교통애로현황

- '82~'88년간에 도로신설 및 확장에 투자한 실적은 총 1조 1,038억원(연평균 1,570억원)으로서 투자가 극히 저조
 - 고속도로건설: 8,938억원(신설 5,907, 확장 3,031)
 - 국도확장: 2,100억원
- 이에 따른 교통애로구간의 증가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

교통애로구간 현황

(’89말현재)

구 분	계	고속도로	국 도
계	1,046km	256	790
수도권 지역	510	104	406
기타 지역	536	152	384

※ 교통애로구간: 실제교통량이 도로용량을 초과하는 구간

(2) 교통애로해소대책

- 교통애로구간 1,046km를 '93년까지 해소하기 위한 3조 8,000억원의 소요재원은 세계잉여금, 차관도입, 도로공사채발행, 민자유치 등으로 확보

- 금년에는 교통애로구간의 조기해소를 위하여 약 1조원을 추가투자할 계획임.

〈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〉

- 수송난이 심각하여 신설 또는 확장이 시급한 9개 고속도로 선로에 대한 사업비를 증액하여 당초 공기를 1~2년 단축
 - 한남~양재, 냉정~구포 등 5개구간의 확장사업
 - 제2경인, 판교~안양 등 4개구간의 신설사업
- 추가재원은 도로공사채 발행 등 장기차입으로 충당하고 원리금 상환자금은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강구
 - 서울 외곽도로 등 민자유치가 가능한 구간은 민자유치방안도 적극 강구

〈국도 확장〉

- 교통체증이 심한 62개구간(790km)의 투자사업을 조기 완공추진
 - 해주~능곡 등 9개구간은 '91년에 완공
 - 반월~군포 등 53개구간은 '92~'93년에 완공
- 추가재원은 단기적으로 세계잉여금 활용. 사업간 투자우선순위조정 등을 통하여 마련하고, 공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조치 강구

〈도시가로망 정비〉

- 대도시 관통 국도중 정체가 심한 12개구간(26km)도 공기를 1년 앞당겨 금년에 완공

나. 도로포장 목표의 달성

- '92년까지 국도, 지방도를 100%, 군도는 80%까지 포장하기 위하여 금년에 국도는 95%, 지방도는 79%, 군도는 62%까지 포장
- 지방도 및 군도 포장사업은 '91년부터 지방양여금으로 지원

도로별	연장	'90	'91	'92
국도	12,190km	91%	95	100
지방도	10,558	69	79	100
군도	13,414	48	62	80

다. 도로시설의 체계적 정비

- 전국도로망체계를 재정비하고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
 - 현재 도로연장 56,481km를 향후 20년간 2~4배 수준으로 확충
 - 수송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국도·지방도의 노선을 재정비
 - 대도시권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망체계를 구축
 - 전국을 223개구역으로 구분, 정기적으로 교통량조사를 실시하여 투자우선순위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
- 통일에 대비한 남북간 연결도로망을 구상하여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

3. 토지의 가수요억제와 실수요자에 대한 토지공급의 확대

가. 토지에 대한 가수요억제로 지가안정 기반구축

- '90년중 토지거래허가제의 확대 실시, 임야매매증명제 및 부동산동기의무화제도의 도입, 토지거래규제 및 각종 토지관련세제의 강화 등으로 지가가 점차 안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.
- 금년에는 이들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토지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지가안정을 유도

-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개선
 -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허가대상 확대: 600m²초과→330m²초과
 - 토지거래허가제 실시지역 지정권의 일부를 시·도에 위임하여 투기발생에 신속하게 대처
 - 농지 및 임야매매증명을 받은 경우 실수요자로 인정하여 중복규제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
- 토지공급을 확대(택지 1,640만평, 공장용지 370만평)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
- 2,450만 개별필지의 가격 및 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정보를 전산입력하여 토지정책수립과 각종과세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
- 30만 공시지가 표준지의 지가공시: '91. 2
-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,450만 개별지가 조사, 확정: '91. 6
- 2,450만 개별지가의 전산입력: '91. 9

나. 공업용지 확대공급

-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업용지를 확대공급
 - 2001년까지 3,400만평 공급(수요: 3,040만평)
 - '91년에는 370만평 공급(수요: 286만평)
- 총량적인 공업용지공급의 확대와 동시에 기업의 입지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유입지 확대 공급
 - 경지와 산림보전지역에 공장설치허용 확대로 기업의 자유입지 확대
 - 용도변경기준을 제정하여 기준에 적합시 공업용지로 활용
 - 45천평미만의 용도변경권한은 시·도지사에게 위임
 - 실수요자인 민간기업에 공단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
 - 3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희망하는 지구에 공업용지를 지정하고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
 - 공공기관이 지정한 공단지개발예정지구의 사업시행에 있어서 민간기업과의 합동개발방식 도입
- 단기수요에 부응하여 수도권지역의 공업단지조성을 제한적으로 추진

- 개발유도권역내 2단계 개발계획('92~'96) 지구를 조기 착공하고 지역별 규모는 입주수요를 감안하여 조정
- 자연보전권역과 개발유보권역에서의 소규모(18천평 미만) 공단 개발허용

다. 해안매립에 의한 국토확장사업의 전개

- 2001년까지 총 373백만평의 각종 용도별 토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'90. 12 수립한 중장기해안매립계획에 따라 해안매립추진

(백만평)

구 분	2001년까지	시공중	'91착수	'92 이후
계	373	279	22	72
농업용지	243	243	-	-
공업용지	42	24	4	14
도시	76	8	18	50
발전	6	2	-	4
쓰레기매립	6	2	-	4

- '91추진계획
 - 이미 시공중인 279백만평의 해안매립지에 대한 입지여건을 종합분석하여 농업용간척지를 공업용지 등 타용도로 전환검토
 - 매립예정지 중 가장 경제성이 높은 22백만평 매립 착수
- 공공부문에 의한 해안매립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실수요자에 의한 민간매립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규 개정 추진
 - 민간매립에 대한 위치 및 면적제한을 완화하여 대상범위 확대
 - 개발이익환수비를 조정으로 해안매립의 수익성 보장

4. 맑은 물 공급과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·관리

가. 중장기 물공급계획의 수립

- 늘어나는 용수수요를 충족시키고 홍수피해를 줄이는 한편, 5대강 유역별 수자원종합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계별 중장기 물공급계획을 수립('90.12)
- 이를 토대로 지역별, 용도별 용수공급계획을 수립

용수수급계획

(억톤)

구 분	'91	'96	2001	2001까지 증가
• 수 요	282	302	330	48(17%)
생활용수	49	59	71	22(45)
공업용수	25	28	31	6(24)
농업용수	151	158	164	13(9)
유지용수	57	57	64	7(12)
• 공 급	309	326	349	40(13)
• 과 부 족	27	24	19	

나. 광역적 용수개발과 홍수조절능력증대를 위한 다목적댐건설

- 현재 건설중인 3개 다목적댐 중 주암댐과 임하댐은 '91년내에 준공하고 남강댐보강사업은 '95년도에 준공할 계획이며
 - ※ 주암댐 및 임하댐의 준공으로 10억톤의 수자원 확보
- 용담, 부안, 횡성, 밀양댐은 '91년에 착공하여 '97년까지 준공추진

다. 맑은 물의 공급확대

- 2001년까지 급수의 질과 양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

구 분	'90	'96	2001
상수도 보급율	78%	85	90
하수처리율	31%	65	70

- 지역간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광역상수도시설을 확충

- 섬진강과 금호강계통은 '92까지(43.5만톤/일) 완공하고 수도권 IV단계와 주암댐계통은 '93까지(190만톤/일) 완공
- 2001년까지 14개 광역상수도의 신설 또는 확장
 - 신설(9): 임진강, 횡성댐, 충주댐, 보령댐, 용담댐, 부안댐, 밀양댐, 목포권, 포항권
 - 확장(5): 수도권(V), 대청(II), 주암(II), 낙동강(II), 남강(II)

- 깨끗한 상수원 확보를 위한 하수처리장 건설확대

- 건설중인 48개사업은 '96까지 완공하고 2001년까지 109개소 추가건설
 - 공업도시 (3): 울산, 온산, 창원·마산
 - 일반도시(45): 청주, 제주, 수원 등
- ('91착공: 전주, 부천, 공주 등 7개 도시)

라. 5대강 치수사업과 홍수통제관리체계 구축

- '91년에 낙동강, 금강, 섬진강, 영산강 등 4대강 수계치수사업에 660억원을 투자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에 589억원을 투자하여 홍수피해를 예방

※ 한강수계치수사업은 '91년에 기본계획수립(조사비 4억원)

- 과학적이고 신속한 방재를 위하여 5대강 홍수통제체계 구축

- 한강, 낙동강, 금강, 섬진강수계: 기설치·운영중
 - 영산강수계: '91. 6 설치
- 굴포천의 근원적인 수해예방을 위하여 방수로공사 착공

'91.12~'91.6: 경인운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

'91.7~'91.8: 굴포천 실시설계(우선착공부분)

'91.9: 착공

※ 타당성조사중인 경인운하는 그 조사결과에 따라 굴포천 방수로와의 연계 개발방안 및 사업비 분담 등 대책강구

5. 도시공간의 합리적 활용

가. 도시계획 및 개발체제의 정비

- 도시화의 발전과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도시계획 및 개발체제의 재정립 필요
 - 대도시와 주변지역을 광역도시권으로 설정하여 도시간 연결도로, 쓰레기 및 하수처리장, 종합운동장 등의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, 이용토록 하는 광역계획 및 개발체제 구축
 - 도시공간의 입체적 계획과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배치,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, 대지의 크기, 지하공간의 이용범위 등을 정하는 지구상세계획제도 도입
 - 택지개발촉진법,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 다원화된 도시개발 체제를 정비, 체계화하고 도시개발에의 민간참여 확대
- 이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개정 및 도시개발법 제정 추진

나. 건축행정제도의 개선

- 도심지의 토지이용 고도화 촉진
 - 주거·상업용 복합건축물의 건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건폐율, 용적률을 완화하였으며, 이에 부가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일조권제한의 완화
 - 둘 이상의 자투리땅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폐율, 용적률 등의 인

센티브 부여

- 조례위임의 확대에 지역실정에 맞는 건축유도
- 이를 위하여 건축법 개정 추진

6. 지역균형개발시책의 추진과 제도개선

가. 집중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투자확대

- 특정지역, 전주권 및 서해안개발사업에 국고 7,041억원('90대비 24.1%증) 투자

구 분	'90	'91	증가율	비 고
계	5,673억원	7,041	24.1%	
4개 특정지역	1,177	1,606	36.4	다도해, 태백산, 제주도 '88고속도로주변
전주권 2단계	183	275	50.3	
서해안개발	4,313	5,160	19.6	전주권2단계 및 특정지역 중복분 제외

나. 수도권 집중억제시책의 지속추진

- 물리적 규제에 의한 수도권 집중억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제적 규제방식을 추가로 도입하고, 수도권기능의 지방이전도 병행추진

수도권집중현황

	'80	'85	'89
인구집중도	34.9%	38.8	43.1
제조업체수	43.8%	54.8	58.8

- '95년까지 11개청의 대전이전계획과 병행하여 지역균형발전기획단에서 건의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
 - 관련 공공 및 유관기관의 이전
 - 지방교육 및 금융의 육성
 - 수도권과 기타지역간의 토지이용규제의 차등화
-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 신·증설시 과밀부담금 부과

다.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정비

- 도 및 군단위의 지역계획에 사회간접시설 등의 배치와 투자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여 실천력 있는 계획으로 발전
- 지역개발자원의 확충
 - 「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」 재원을 지역개발에 확대투자
 -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대한 과밀부담금 활용
 - 각종 지역개발사업에의 민자유치 활성화
- 지역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개발지원단 설치
- 인구, 지역생산, 소득, 도로, 상하수도, 교육, 문화시설 등 지역개발에 관한 통계를 정비하고, 이에 근거하여 지역별로 규제와 지원을 차등화
- 이를 위하여 '91년중 지역균형개발법 제정 추진

7. 건설산업의 육성발전과 건설행정의 합리화

가. 건설산업의 육성발전

건설산업의 비중증대(GNP의 9%)에 부응하여 건설산업의 체질강화

- 장·단기 경기예측을 토대로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
- 건설수요증대에 따른 전자채 및 인력수급의 원활화대책 강구
우루과이라운드협상진전 등 여건변화에 대응
- 건설시장개방에 대비한 국내건설업 보호대책 강구
 - 경쟁력 보유순위분야부터 단계적 개방일정 마련
 - 일정금액 미만에는 외국업체 참여제한
- 건설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능력의 제고
 - 기술경쟁입찰방식인 설계시공일괄 입찰제도의 확대실시
 - 최신기술 활용촉진을 위한 품셈 및 각종기준의 정비

해외건설진출 확대

- 리비아·이란 등 중동시장의 효율적 관리와 걸프전쟁추이에 따른 신속한 대응
- 미국, 일본 등 선진국시장 수주기반 강화
- 소련, 동구권, 중국 등 신시장 개척
- 대개도국 건설기술협력 강화

나. 도시계획에 관한 중앙기능과 지방기능의 재조정

건설부는 장기적인 도시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(20년)과 국가사업 또는 2 이상의 도시에 걸치는 광역적 도시계획업무만 관장하고

구체적인 단위도시계획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능력을 보강함으로써 지방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도시발전 도모

다. 토지이용제도의 개선

- 경제활성화 및 국민편익증진을 위하여 '89~'90에 걸쳐 용도지역내의 행위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3만평 미만의 용도변경제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31건의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였으나
- 아직까지도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요인이 잔존하고 있으므로
 -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용도지구구분을 축소조정하고
 - 수개의 법률에 의한 중복규제를 단일규제로 일원화하며
 - 탄력적인 행위제한이 되도록 용도변경권한의 지방위임 확대

라. 토지보상제도의 개선

- 보상기준이 미흡한 영업권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영세민에 대한 생활보상수준을 개선토록 하며,
-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설 운영('91.1)하여 토지보상기간을 최대한 단축

8.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('92-2001)의 수립

가. 기본방향

-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의 부족문제와 지역간 불균형문제 등 그간의 국토개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소하고 '90년대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
-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복지사회를 실현

나. 기본목표

-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의 적극유도

- 지방중소도시의 육성 등 지방발전의 촉진
- 수도권 집중의 지속적 억제와 기능의 지방분산 적극유도
생산적이고 개방화된 국토기반의 조성
- 중서·서남부 신산업지대의 조성
- 국내외 간선교통망과 첨단정보망 구축
- 생산현장과 연구·교육·정보기능의 종합체제 구축
국민기본수요의 충족과 쾌적한 환경의 조성
- 주택, 상하수도 및 여가시설의 확충
- 광역적이고 종합적인 환경관리체제 구축
통일에 대비한 국토공간의 일체성 회복
- 도로, 철도 등 단절된 교통망의 복원
- 접경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남북교류공간 조성

다. 추진계획

상반기중 계획안을 작성하고 관계기관협의,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
하반기중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와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확정

II. 걸프사태에 따른 해외건설현황 및 대책

1. 걸프지역 건설진출현황

(’91.1.30 현재)

국 가 별	진출업체수	시공잔액	인 력	장 비
이 라 크	현대 등 5개사	755백만불	13명	1,785대
쿠 웨 이 트	현대	82	-	779
사 우 디 (동 부 지 역)	대림 등 23개사 (대림 등 8개사)	989 (122)	2,046 (4)	5,984 (436)
바 레 인	현대	-	45	510
U A E	현대 등 5개사	21	172	226
카 타 르	현대	-	2	

2. 인력철수

- 쿠웨이트

- ’90.8.27까지 진출인력 313명 전원 철수

- 이라크

- 진출인력 627명 중 605명 철수하였고
- 잔여 22명 중 9명은 1.25 이란으로 대피. 귀국예정이며 잔류 13명도 이란으로 대피예정
- 앞으로 주 이란대사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안전철수지원

－ 사우디

- '91. 1. 28 현재 동부지역 진출근로자 703명 중 699명은 중·서부로 대피하였고, 공사필수요원 4명만 잔류
- 중·서부지역 근로자는 상황에 따라 철수하되, 불요불급한 비필수요원부터 우선 철수

3. 시공관리

가. 현 황

- － 쿠웨이트: '90. 8. 2 이라크가 침공함에 따라 공사중단
- － 이라크: '90. 8. 2 이후 단계적으로 조업을 단축하여 왔고 전쟁발발에 따라 공사중단
- － 사우디(동부지역): '91. 1. 12부터 조업을 단축하고 1. 17 이후 공사중단

나. 예상되는 문제점

- － 발주처에 공사중단사실을 통보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불가항력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공사중단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주체에 관한 분쟁 발생
- － 자재 및 장비의 유실 또는 손회
- － 미수금 수령지연, 유보금해제지연, 어음결제지연 등으로 자금압박

다. 대 책

- － 추가비용은 사태진정후 계약일반조건 및 국제보상관계법규에 의거 클레임제기
 - 여건이 같은 외국진출업체와 공동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전문 국제변호사를 고용하여 손실만회에 최대 노력
 - 정부차원에서 외교채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
- －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한 원유수령 등 방안 강구

4. 향후 중동건설시장의 전망과 대처방안

가. 시장전망

- 단기적으로는 긴장지속에 따라 건설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나
- 장기적으로는 유가인상에 따른 수입증대로 건설발주량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
- 사우디, 리비아, 이란 등에서는 군사시설과 석유채굴, 송유, 저유시설, 석유화학 플랜트, 도시기반시설부분의 발주 증가
- 이라크, 쿠웨이트에서는 전후복구사업 전개

나. 대처방안

- 발주국의 재정상태, 공사의 수익성 등을 충분히 사전점검하여 국별·분야별로 선별참여
- 쿠웨이트
 - 해외자산과 석유자원이 풍부하므로 최우선적으로 석유생산, 저유, 정제시설 및 석유화학시설 복구공사에 참여
- 사우디, 리비아, 이란 등 주변국
 - 석유수입 증대로 군사시설확충에 주력할 것이므로 군사시설관련공사와 석유 화학플랜트, 도시기반시설관련공사에 참여
- 이라크
 - 8년간의 대이란 및 걸프전쟁으로 인한 대금지불능력의 한계를 감안, 신중 대처
 -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의 복구자금지원공사와 금융조달능력이 있는 선진 국업체와 공동진출분야에 참여